



성명서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정책 협약을 기억하라』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1년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예산 심의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이미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한 것도 황당한데, 아직 설립 논의 조차 시작되지 않은 학교 및 기숙사의 설계비 예산을 먼저 편성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 같은 세금이 불합리하고 무책임하게 쓰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추진정책은 양질의 의사를 키우는 것보다, 번번한 수련 병원 조차 없이 관료들의 입맛에 맞는 의사를 늘리는데만 집중한 졸속 계획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생을 받는다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시민단체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입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혀 공분을 산 바있다. 게다가 이미 전북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와 어떤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는지, 벌써 해당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 부지 선정과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두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한민국 의료를 퇴보시킬 것이 자명한 정부의 졸속 공공의대 정책 추진으로,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젊은 의사들이 전국적인 파업에 임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한 것은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 간의 정책 협약 합의였다. 공식 발표된 합의문에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2021년 예산을 책정한 것은 명백한 의-정 합의 위반이며, 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예산 심의에 참여하여 예산안의 통과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 또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 이행 합의를 어긴 장본인들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어린 의과대학생들까지 희생하며 어렵게 합의에 이른 약속을 손바닥 뒤집 듯 어기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기만하는 일이다.

본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목표로,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 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 선반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공공의대 정책의

줄속 추진을 멈추고,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고 누적 사망자가 500명에 임박한 코로나19의 극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신의를 가진 파트너로서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가 시작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2020. 11. 19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이은아